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4월 16일

ISSN 1976-0507 Vol. 4 No. 17

중·미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
격화의 경과와 배경

나 수 업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 3460-1072)

- 2009년 4월 이후 미국의 빈번한 대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이하 AD·CVD) 조치에 중국의 반발과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양국간 통상 분쟁이 격화되고 있음.

 - 미국의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AD·CVD 조사 개시(2009년 4월)로부터 비롯된 양국간 AD·CVD 분쟁은 타이어 분쟁(2009년 9월)을 거쳐 철강, 자동차, 화학 및 제지, 닭고기 등으로 확산되며 격화됨.
- 대중 무역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음.

 -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임.
 - 중국은 미국이 처음으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AD·CVD 조치를 강화한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이며 맞대응을 하고 있음.
- 이번 양국간 분쟁은 최근 미국 내 중국의 환율조작 시정 요구와 맞물려 있고, CVD 중심의 대중 수입규제와 중국의 반발 및 대응이 이어짐으로써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이번 분쟁의 파장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외교역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양국의 AD·CVD 조치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분쟁의 현황

- 2009년 들어 미국의 대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이하 AD·CVD)¹⁾ 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양국간 통상 분쟁이 격화됨.
- 미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ITA)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AD·CVD 조사 개시 건수는 2008년 15건에서 2009년 22건으로 늘어나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함.
- 이는 2009년 미국의 전체 AD·CVD 조사 총 34건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줌.²⁾
-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강화에 대해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AD·CVD 조치로 맞서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가. 발단

- 양국간 AD·CVD 분쟁은 2009년 4월 미국의 중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원유·천연가스 채굴 및 운반용 파이프) 제품에 대한 AD·CVD 조사 개시로부터 비롯됨.
- 미 상무부는 중국산 유정용 강관 제품의 덤핑행위와 보조금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 철강업체 및 노조의 제소³⁾를 받아들여 2009년 4월 29일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함.⁴⁾
- 이는 양국간 무역구제 제소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바⁵⁾, 양국 통상관계를 긴장시키며 AD·CVD 분쟁의 불씨를 제공함.

나. 본격 점화

- 중·미간 AD·CVD 분쟁은 2009년 9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1)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 정부가 당해 국내 생산자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무역구제 조치의 대표적인 수단임. 반덤핑관세(Anti dumping Duty)는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며,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됨.

2) 중국 다음으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대만으로 각각 3건에 불과함.

3) 2008년 미국의 중국산 유정용 강관 수입액이 2006년에 비해 약 4배 늘어난 27억 달러에 달했음.

4) 이후 미 상무부는 4개월의 조사를 거쳐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림(2009년 9월 9일).

5) Chinadaily(2009.12.31)

조치 발동과 중국의 반발 · 대응을 계기로 본격, 가열되기 시작함.

-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9월 26일부로 향후 3년간 승용차와 경트럭용 중국산 타이어에 35~25%(매년 5%포인트 인하)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특별세이프가드 조치⁶⁾를 발동함(2009년 9월 11일).
- 중국정부는 미국의 특별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강력한 대응의사를 밝힘.
- 중국 상무부는 2009년 4월 13일 미국산 닭고기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AD·CVD 조사 계획⁷⁾을 발표하는 한편, 9월 14일 미국의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함.⁸⁾
- 미국정부는 대중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 통상법에 따른 적법조치임을 강조하고, 중국의 AD·CVD 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보복무역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함.

다. 악화

- 중 · 미 간 AD·CVD 분쟁은 2009년 10월 이후 철강,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 걸쳐 양국이 경쟁적으로 AD·CVD 조사 개시, 예비 및 최종 판정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더욱 거세짐.
- 미 상무부가 10월 27일 중국산 철강격자(steel grating)에 CVD 부과 예비판정을 내리자, 중국 상무부는 11월 1일 미국산 아디프산(Adipic Acid)에 AD 부과를 최종 판정함.
- 11월 5일 미 상무부의 중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즉각 '차별적 보호주의'라며 반발하고, 11월 6일 배기량 2000cc 이상인 미국산 승용차와 SUV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 개시 발표로 응수함.
- 또한 중국과 미국은 2009년 12월 중 각각 1건과 2건의 철강 관련 AD·CVD 조치를 주고받으며 양국간 무역구제 분쟁은 악화일로로 치달음.

■ 양국간 무역구제 조치 공방 열기는 해를 넘긴 2010년 들어 철강은 물론 닭고기, 화학

6) 이는 미 통상법 Section 421에 의거한 조치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시, 중국산 수입품의 상대적 혹은 절대적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발생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 중국산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발동을 가능하도록 한 합의에 근거한 것임(2013년 만료 예정).

7) 중국 상무부는 2009년 9월 26일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실제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

8) 중국이 주장하는 WTO 제소 근거는 △ 미국이 대중 세이프가드 조항을 부당하게 적용함으로써 GATT 제1조 최혜국대우를 위반하였으며 △ 중국산 타이어 수입이 급증되거나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나 위협이 될만한 중대요인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고 △ 3년 간의 추가관세 부과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임.

및 제지제품으로까지 확산되며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2010년 1월부터 미국의 대중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한 AD·CVD 조사와 예비판정 조치가 잇달아 취해지자, 2월 5일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으로 맞대응함.
- 3월에는 미 상무부가 중국산 제지와 화학제품에 AD·CVD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중국은 반박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를 비난하며 맞섬.

표 1. 중 · 미 간 AD·CVD 분쟁 경과 주요 일지

분쟁 단계	미국	중국
발단 (2009.4)	•중국산 유정용강관 AD·CVD 조사개시(4.29)	
본격 점화 (2009.9~10)	•중국산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치발동(9.11) •중국산 광택지 AD·CVD 조사개시(10.14)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 WTO제소(9.14) •미국산 닭고기 AD·CVD 조사개시(9.26)
악화 (2009.10~)	•중국산 철강격자 CVD 예비판정(10.27) •중국산 유정용강관 AD 예비판정(11.5) •중국산 유정용강관 CVD 최종판정(11.24) •중국산 철강격자 AD 예비판정(12.29) •중국산 유정용강관 CVD 산업피해 최종판정(12.30) •중국산 와이어데킹 AD 예비판정(1.21) •중국산 드릴파이프 AD·CVD 조사개시(1.21) •중국산 무계목강관 CVD 예비판정(2.24) •중국산 포타슘인산염 및 광택지 CVD 예비판정(3.2)	•미국산 아디프산 AD 최종판정(11.1) •미국산 승용차SUV AD·CVD 조사개시(11.6)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관 AD·CVD 예비판정(12.10) •미국산 닭고기 AD 예비판정(2.5) •일련의 미국 AD·CVD 조치에 대한 비난성명 발표(3.9)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중국 상무부; WTO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2. 분쟁의 특징

가. 미국의 대중 상계관세 활용 강화⁹⁾

- 이번 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의 상계관세(CVD) 이용 빈도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CVD가 본격적으로 대중 무역구제 조치 수단으로 부상한 것임.
- 미 상무부는 1984년 이래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지위 국가에 대해서는 CVD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¹⁰⁾

9) 미국의 CVD 활용 문제는 3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함.

-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2007년 3월 미 상무부가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CVD 예비판정을 내림으로써 23년 만에 처음으로 변경됨.¹¹⁾
- [표 2]를 보면 미국의 대중 CVD 조사는 200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나, 미 상무부의 정책변경 이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¹²⁾
- 2009년 CVD 조사 건수는 AD·CVD 건수를 합한 22건 중 절반에 가까운 10건에 달함.

표 2. 미국의 대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추이(조사개시 기준)

(단위: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AD + CVD	4	4	19	15	22
CVD	0	1	6	5	10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ITA).

나.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

- 미국은 “미국 = 소비(수입), 중국 = 저축(수출)”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불균형을 국제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최근 위안화 절상압력이 높아진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 바, 미국은 대중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안화 절상압력 수위의 제고와 함께 AD·CVD 조치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¹³⁾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적자 악화의 대외요인의 하나로 대중 무역적자에 주목하고 있음.
- 특히 2009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규모가 2008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무역적자의 비중이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자, 이의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는 미국 내 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됨.

10) 1984년 미 상무부는 비시장 경제지위를 가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과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파괴 등의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비시장 경제지위 국가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함.

11) 본건에 대한 제소와 조사개시는 각각 2006년 10월과 11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은 물론 비시장 경제지위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임.

12) 2007년과 2008년 조사가 개시된 상계관세 제소에 대해서는 모두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이 내려짐.

13)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 규모는 2009 회계연도 기준 1조 4,130억 달러로 GDP 대비 9.9%에 달함.

표 3.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429.9	482.8	549.0	671.8	790.9	847.3	840.0	840.3	517.0
대중	83.1 (19.3)	103.1 (21.4)	124.1 (22.6)	162.3 (24.2)	202.3 (25.6)	234.1 (27.6)	258.5 (30.8)	268.0 (31.9)	226.8 (43.9)

주: () 안은 전체 미국 무역적자 대비 대중 무역적자의 비중임.

자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강 국면에 진입한 미국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미국 내 경기회복 촉진에 대한 압력이 비등함.

- 미국경제는 4분기 연속(2008년 3/4분기~2009년 2/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¹⁴⁾을 기록하였으며, 고용시장은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2009년 10.1%)에 이를 정도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수출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경기회복의 핵심전략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배경에서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와 위안화 절상압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게 고조됨.

■ 2010년 11월 중간선거(하원 전석, 상원 1/3석)를 앞두고 미 의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미 의회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위안화 환율조작, 덤핑 및 보조금 지급 등)로 자국 산업과 노동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 한편 금융위기 이후 부진에 빠져 있는 미국의 산업계와 관련 노조들도 중국의 덤핑 및 보조금 행위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규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

○ 이번 중 · 미 간 AD · CVD 분쟁에서 미국의 대표적 위기 산업인 철강 및 제지 등의 제소가 노조 주도로 이루어진 점은 이 같은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 중국의 강경 대응

■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여전히 수출 부진 타개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14) 미국경제 분기별(2008. 3/4 ~ 2009. 2/4) 성장률: -2.7% → -5.4% → -6.4% → -0.7%, 2009년 전체 성장률은 -2.4%임.

바,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임.

- 중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 3/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부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 중 하나임.
- 중국 수출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를 지속한 결과, 2009년 경제성장에 대한 순 수출의 기여도는 1999년 (-0.1%포인트)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3.9%포인트)를 기록함.
-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게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수입규제 조치 강화는 수출회복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또한 중국은 미국이 처음으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CVD 조치를 강화한데 대한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대중 AD·CVD 조치 강화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반발과 보복 대응으로 맞서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분쟁 격화의 연결고리 역할로 작용했다고 판단됨.
- 2000년 이후 중국의 대미 AD·CVD 조사 건수(2010년 2월 기준, 총 24건) 가운데 약 1/3인 7건이 이번 분쟁 과정 중 이루어짐.¹⁵⁾

표 4. 미국의 대중 AD-CVD 조치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

미국	중국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국내 통상법의 적법한 조치	• 자국 통상법의 일방적 악용이며 불공정한 조치로 WTO 규정을 위배
• 대중 무역적자 심화로 인한 자국 산업 및 노동자 피해 보호	• 미국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약화에 있기 때문에 이를 중국 제조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수용 불가
• 경제회복을 위한 수출촉진 전략	• 자국의 수출촉진을 위해 다른 국가의 수출을 제한하는 전략은 국제무역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임. • 미국이 수출확대를 원한다면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의 기본원칙을 고수해야 함. •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으로 제한하고 있음.

자료: Inside US-China Trade; 중국 상무부의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15) 미 상무부의 "U.S. Products Subject to Foreig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에 근거

3. 전망 및 시사점

가. 향후 전망

- 이번 분쟁의 향후 전개 방향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미국 내 중국의 환율조작(위안화 절상 압력)과 상계관세(CVD) 조치의 연계문제임.
- 최근 미 하원의원 130명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및 게리 로크 상무장관에게 제출한 공개서한(2010년 3월 15일)에서 미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함.¹⁶⁾
- 또한 미 상원 찰스 슈머(민주당),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의원 등은 3월 16일 환율조작 제재법안¹⁷⁾의 제출을 통해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을 불공정 보조금 지급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CVD 조치로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함.
- 이에 대해 철강, 제지 등의 산업계 및 관련 노조들은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출함.
- 환율조작 제재 법안의 경우 양국간 통상관계에 미치는 파장효과가 커 오바마 행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함.
- 이번 분쟁 과정 중 특별세이프가드, CVD 등 새로운 무역구제 수단들이 부상하였으며, 특히 CVD는 향후 미국의 대중 무역구제 조치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중국의 산업고도화 추진과정과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정책 중 중국정부에 의해 시행된 각종 산업지원정책 및 세제우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미국 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중 · 미 분쟁은 최근 미국 내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CVD 조치 강화 요구와 맞물려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양국 분쟁은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2010년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상반

16) 미 재무부는 1년에 두 번 주요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Semi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를 작성하는데, 미 의회는 이번에 1994년 이후 재무부가 한 번도 환율조작국을 지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및 CVD 조치 강화를 촉구함.

17) 환율조작 제재법안(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of 2010)은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미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이후 수차례 제정이 추진된 바 있음.

기 보고서 발표 시기를 전후로 한 차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¹⁸⁾.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양국간 AD · CVD 분쟁은 전면적인 통상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지만, 미국의 기대대로 중국정부가 위안화 절상 요구에 응하거나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면 양국 분쟁은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이번 중미간 AD · CVD 분쟁 격화의 불뚝이 우리나라 수출에 될 수 있음.

- 물론 대미 수출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품목 중 이번 분쟁의 주요 규제 품목(타이어, 제지, 일부 철강제품, 포타슘인산염 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이 대중 AD · CVD 조치 시 인도네시아,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¹⁹⁾

■ 이에 따라 이번 분쟁으로 인한 우리의 실익을 따지기 전에 대외교역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양국의 AD · CVD 조치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최대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노력이 보다 중요함.

- 양국의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 발동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미국과 중국을 비롯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CVD 조치를 무역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무역구제 주무기관인 무역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D 신청 건수가 204건(1987년~2010년 2월)에 달하고 2010년 2월 현재 32개국 15개 품목에 대해 AD를 부과 중인 반면, CVD 조치를 발동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KIEP**

18) 동 보고서는 당초 2010년 4월 15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4월 말), 중 · 미전략경제대화(5월), G20 정상회담(6월)을 앞두고 보고서 발표 시점을 연기한다고 밝힘(2010년 4월 3일).

19) 미 상무부는 대중 철강패스너에 대한 AD · CVD 조사 개시(2009년 10월 14일) 및 대중 광택지에 대한 CVD 예비판정(2010년 3월 2일)에 각각 대만과 인도네시아를 포함시켰으며, 2009년 이루어진 AD · CVD 조사의 90%가 아시아 국가에 집중됨.